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5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2. 5.

발 의 자 : 이헌승 · 홍석준 · 이종배
서병수 · 백종현 · 임이자
이양수 · 송석준 · 박성민
박수영 · 허은아 · 최형두
김성원 · 하태경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는데,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,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지반침하는 한번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,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

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.

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,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·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8조 및 제45조의2 신설 등).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 제목 중 “지반침하”를 “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(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·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(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.

제5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제56조제3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의2.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<u>지반침하</u>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) ①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은 <u>지하시설물에</u>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·금지하거나 보수·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	제38조(<u>지하시설물에</u> 의한 <u>지반침하</u>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) ①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및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국토교통부장관(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을 말한다)-----.
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	③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및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----- -----

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45조의2(지하개발사업에 의한

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·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(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

<p>제5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6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1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7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4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의2. <u>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